

'1석3조' 촘촘한 노면전철... 저비용 고효율에 매연·체증도 없다

긴급 점검 광주 도시철도 2호선

<4> 외국 선진도시 공공교통

유럽의 선진도시들은 전기에너지를 쓰는 도시철도(노면전차)를 핵심 도시교통 수단으로 하고 있다. 저비용 고효율에 의한 도시 공해 방지, 화석에너지 소비 감소 등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도로를 자동차와 공유한다는 점에서 기존 교통시스템을 전면 개편했다.

네덜란드 덴 하그의 출근길 도로는 직장인들의 자전거 행렬과 노면전차가 어우러진다. 노면전차의 수송분담률은 거의 40%에 육박하고 있으며, 약 500m 단위로 정거장이 있어 누구나 불편 없이 이용할 수 있다. 보도와 노면전차, 차도가 교차할 때 사고 위험성도 있지만 보행자-자전거-노면전차-자동차의 순으로 진행되는 원칙과 다양한 높이의 교통 신호등이 이들의 자연스러운 소통을 이끌고 있다. 역이 필요 없이 정거장만 설치하면 되고 간선 노면전차의 경우 바닥을 녹지로 꾸미고 주변에 가로수를 심어 사실상 도시공원처럼 꾸며졌다.

프랑스 리옹은 그 어느 도시보다 노면전차 종류가 다양하다. 노면전차, 노면버스(전기에너지)에 지하철도도 있다. 간선은 5량 정도로 수송능력이 뛰어나고, 지선은 2~3량의 굴절노면버스와 1량의 노면버스가 운행되고 있다. 프랑스 스트라스부르는 1912년 사라졌던 노면전차를 1991년에 다시 복원했으며, 도로 중심부 폭 6m 정도를 차지하며 도시 곳곳에 뻗어있다. 곡선 굴절도 무리 없이 운행하고 있으며 다양한 디자인으로 마치 도시의 예술품처럼 인식되고 있다.

독일 프라이부르크도 1950년대 제2차 세계대전으로 폐허가 된 도시를 리빌딩하면서 1920년대의 노면전차 라인을 복원해 그린벨트와 엮은 5개의 노선을 주축으로 주거지를 배치했다. 노면전차 노선 중 88%가 수익을 내고 있다.

광주 역시 도시철도를 주축으로 해 시내버스, 마을버스 등 공공교통수단을 중심으로 도시교통시스템을 전면개편해야 비로소 현재의 적자 누적에서 벗어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광주를 비롯한 부산, 대전, 대구 등이 모두 승용차 중심의 교통시스템을 유지하면서 도시철도를 설치·운영, 적자를 면치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일본 고베시의 경우 촘촘한 도시철도망과 버스, 택시와의 연계를 통해 승객을 유입하고, 역세권을 중심으로 주변 상점을 활성화시켜 재정을 개선해가고

광주 대중교통에 1000억 도로개설 등 700억 투입 승용차와 '투 트랙' 정책 지하철 적자탈피 길 없어

있다. 단선 도시철도, 적은 승객, 연계 교통 미흡 등으로 역세권을 형성하지 못하는 광주의 현실과는 근본적인 차이점이 있다는 것이다.

광주 일부 시민·사회단체가 내년 상반기 2호선 착공을 앞둔 상태에서도 회의적인 반응을 보이는 것은 건설비와 운영비 등 관련 예산에 비해 교통수송분담률이 10%에도 못 미치는 등 비효율적이기 때문이다. 각 도시들이 추진하고 있는 '투 트랙' 교통정책에 대한 문제제기이기도 하다. 미래형 교통체계로서 도시철도와 버스 등 공공교통수단을 중시하면서도 승용차의 도로주행속도를 높이기 위해 도로 건설에도 힘을 쏟고 있는 모순이 존재한다는 것이다.

광주시는 지난해 도시철도공사 지원금으로 423억4900만원, 준공예정 지원금 등 버스 지원에 542억5400여만원, 택시업계 지원에 22억4200여만원 등 988억4500여만원을 투입하고, 또 한편으로 도로 개설 등에 702억5000여만원을 썼다. 모두 1691억원에 이르는 혈세를 도로와 공공교통에 배정한 것이다. 승용차타기가 편리할수록 대중교통의 이용은 감소하고 운용주체의 '적자'는 불가피한 대가를 고수하고 있다는 것이다.

승용차의 주행과 주차에 대한 규제도 없다. 과거 공공기관을 중심으로 5부제를 시행했으나 무의미해졌고, 도심 도로에서의 불법주정차 단속도 찾아보기 어렵다.

이와 관련 미래형 교통체계를 확보하기 위해선 도시의 앞날을 보는 큰 그림을 그리는 게 중요하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간선기능을 하는 도시철도와 지선기능을 해야 하는 시내·마을버스 등 각 수단별 승객 동선을 고려한 공공교통시스템이 설계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또 도시 내 승용차의 운영을 최대한 규제해 공공교통수단의 편의성, 정시성을 높여 이윤을 유인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최완석 광주대 도시계획·부동산학부 교수는 '도시철도 2호선은 광주시 대중교통 체계의 전면개편이 전제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 교수는 "현재의 도시철도 운영방식은 2호선이 개통된 후에도 역할을 하기에 무리가 있다"며 "간선은 도시철도 1·2호선, 시내버스는 보조간선 역할처럼 교통체계를 확실히 정립해야 도시철도의 기능이 향상될 수 있다고 본다. 20년 후의 공공교통 청사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윤현석기자 chadol@kwangju.co.kr



문재인 대통령과 미르지오예프 우즈베키스탄 대통령이 23일 청와대에서 확대정상회담을 하기 앞서 악수하고 있다. /연합뉴스

사드배치 이전으로 한중관계 되돌리기

文대통령 내달 중순 방중 양국외교 '국빈 방문' 합의

문재인 대통령이 다음 달 중순 중국을 '국빈' 자격으로 방문한다. 방중의 격을 최대한 높임으로써 얼어붙었던 관계의 '해빙'을 넘어서 '개화'의 단계로 나가자는 양국의 의지가 담긴 것으로 풀이된다.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로 급랭한 양국 관계는 지난 10·31 합의와 시진핑 국가주석 및 리커창 총리의 잇따른 회담을 거치면서 해빙기에 접어들었으며 이번 국빈 방문으로 완전한 정상화 수순을 밟을 것으로 기대된다.

국빈 방문은 정상 임기 중 한 나라에 한 번만 하는 게 외교 관례이고, 방문국에서 상대국 정상을 국빈으로 초청하면 이에 응하는 형식으로 진행된다. 즉, 한중 양국은 지금이 한중 관계를 가속할 수 있는 적기로 보고, 국빈 방문에 합의한 것으로 분석된다.

이에 따라 양국 정상은 내달 정상회담에서 끊기다시피 했던 양국의 교류를 재생하고 실익을 주고받는 데 더욱 집중할 것으로 전망된다. 문 대통령은 사드 배치 이후 관광·음악·영화·자동차·유통 등 우리 기업에 전방위적으로 가해진 보복을 해소하는 데에서 한 발짝 더 나아가 더욱 강화된 경제·문화적 협력과 교류의 물꼬를 트는 데 초점을 맞출 것으로 보인다. 특히, 북핵 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위한 양국의 '추진 및 협력'도 계속될 전망이다.

한중 간 베이징 정상회담은 내년 2월 서울 정상회담으로 자연스럽게 이어질 가능성도 점쳐진다. 문 대통령은 지난 정상회담에서 시 주석에게 평창 동계올림픽에 맞춘 방안을 요청했고, 시 주석은 노력하되 못 오더라도 고위급 대표단을 파견하겠다고 화답했다. 시 주석의 내년 2월 방한이 성사되면 양국 관계는 정상화를 넘어 번성기로 접어들 계기를 마련하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문재인 대통령은 23일 오후 청와대에서 국빈 방문 중인 샤프카트 미르지오예프 우즈베키스탄 대통령과의 단독 정상회담에서 "대한민국은 우즈베키스탄과의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더욱 발전시켜 유라시아 대륙의 평화와 번영을 함께 주도하는 아주 좋은 친구가 되고 싶다"고 말했다.

이에 미르지오예프 대통령은 현재 장관·차관·상원의원·하원의원 등을 역임하고 있다"며 "우즈베키 민족과 한국 민족은 하나의 가족으로 아주 잘 살아가고 있다"고 강조했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지방정부'로 명칭 바꾸기 큰 이견 없이 공감 지방법원장·검찰청장 직선 사법분과서 논의

지방분권 개헌 쟁점과 전망

지방분권 개헌을 위한 정치권의 논의가 속도를 내고 있다. 개헌에 대한 다수 국민의 눈길이 권력구조 개편에 쏠려 상대적으로 관심을 덜 받고 있지만 지방분권 강화를 위한 헌법 개정 작업은 이미 상당 부분 진척됐다. 물론 입법권의 주체, 자치권 범위, 양원제 도입 등을 놓고 여야는 물론 학계·시민단체 등의 입장이 엇갈리고 있어 추가적인 논의는 좀 더 필요하다.

◇지방분권 개헌논의 어디까지=정세균 국회의장과 여야 3당은 23일 '개헌관련 확대 원내대표 회동'을 갖고 "이번이 개헌·선거구제 개편의 적기"라고 한목소리를 냈다. 특히 이번 논의를 통해 국민의 기본권을 신장하고 '지방분권을 이뤄 내자'는 대원칙을 다시 한번 확인했다.

앞서 국회 헌법개정특별위원회(위원장 이주영 의원) 자문위원회 지방분권분과는 지난 8월 지방분권 관련 최종 개헌 합의안을 마련해 국회에 공식제출했다. 올 초 개헌특위가 출범한 지 10여 개월 만에 지방분권 분야에서 첫 성과물이 나온 것이다.

개헌특위는 오는 28일 전체회의를 열어 지방분권 분과 자문위가 제출한 합의안을 놓고 집중토론에 들어간다. 지방분권과 관련한 개헌안 조문화 작업은 자문위에서

헌법 명문화·입법권 논란

국회 개헌특위

28일 자문위 합의안 토론회

이뤄진 것이 사실상 유일해 여야 개헌특위 위원들의 의견제시와 쟁점 정리 등을 통해 뼈대가 만들어질 것으로 보인다. 이후 개헌안 작성을 위한 기초소위원회에서 이를 기초 자료로 활용해 지방분권 분야 개헌안을 최종 확정할 예정이다. 지방분권의 당위성에 대해 여야 모두 공감하고 있고, 문재인 대통령도 수차례 필요성을 강조한 만큼 일부 민감한 조항을 제외하면 연내에 조문화가 완료될 수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지방분권 둘러싼 쟁점은=헌법 제1조 3항에 '대한민국은 지방분권 국가'라는 내용을 신설하는 부분부터 논란이 되고 있다. 이는 중앙집권적 성격을 지니고 있는 우리나라를 지방분권 국가로 이행하게 하는 선언적 의미를 지니는데, 일부 의원은 지금도 분권국가로 규정할 수 있는데 굳이 명문화할 필요는 없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지방자치단체의 명칭을 '지방정부'로 바꾸자는 데 대해서는 큰 이견이 없다. 다만, 지방정부가 입법권을 갖는 부분을 놓고 상위 법률과 어긋날 경우 혼란이 올 수

있다는 점을 들어 일부 의원들이 반대입장을 내놓고 있다. 또 지역을 대표하는 '상원'을 만들어 양원제를 도입하는 데 대해서도 논란이 크다. 양원제 도입은 의원 정수와 연결된다는 점에서 국회 불신이 높은 우리 정치 환경에 도입하기에는 시기상조라는 지적도 만만치 않다.

이와 함께 일각에서는 연방제 수준의 지방분권을 이루기 위해 지방정부에 사법권을 줘야 한다는 견해도 있다. 지방법원장, 지방검찰청장, 지방경찰청장 등을 주민직선제로 선출하자는 것이다. 이 부분은 지방분권분과가 아닌 사법분과에서 논의되고 있는데 너무 파격적이어서 좀 더 논의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우세하다.

감사원 감사 대상에 지방정부가 포함되는 데 대해서도 논란이 많다. 지방정부의 자치사무를 중앙정부가 통제할 수 있는 독소조항이 될 수 있다는 것이 반대 이유다.

김성호 개헌특위 자문위 지방분권 분과 간사는 "지금도 지자체에 대한 국가나 상급기관의 감사가 1년에 150일이 넘는다"며 "감사 준비 때문에 주민에 대한 서비스를 제대로 못 하는데 이것이 무슨 지방분권이나"고 지적했다. 전국시도지사협의회도 조만간 감사원 감사대상에 지방정부가 포함되는 조항에 대해 반대입장을 밝힐 예정이다. /최권익기자 cki@kwangju.co.kr

제3회 혁신교육 페스티벌

광주교육은 민족주의입니다

2017. 11. 27.(월) - 12. 1.(금)

광주교육연수원, 광주교육과학연구원, 광주학생교육문화회관, 빛고을 혁신학교, 국립아시아문화전당

11.28. 화	- 악기와 함께 떠나는 음악여행 연수원, 14:00 - 예술꽃이 피었습니다 연수원, 14:00 - 청소년사회참여발표대회 연수원, 15:00 - '질문에 질문하다' 인문학 특강 연수원, 15:30
11.29. 수	- 마을교육공동체 결과 보고회 연수원, 14:00 - 4차 산업혁명을 준비하는 말랑말랑한 힘 연수원, 13:00 - 사랑과 생명의 인문학 연수원, 14:00 - 2017 꿈꾸는 문화예술제 학생교육문화회관, 14:00
11.30. 목	- 학부모와 함께하는 소통&공감 콘서트 연수원, 15:00 - 2017 연구학교 합동 보고회 연구원, 15:00
12.01. 금	- 학생 책 출판 기념회 아시아문화전당 극장3, 16:00

광주광역시교육청